

오늘부터 임시국회...5·18 특별법 통과될까

23일까지 2주간...개헌·선거구제 개편 기싸움 예고

공수처 설치·민생 개혁입법 與野·野野 공조 '변수'

국회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마친지 불과 사흘만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헌·선거구제 개편과 개혁입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내년 6·13 지방선거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 성격이 있는 만큼 강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공방 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10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의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 아래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분회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 처리는 불가하다.

또 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직과 내직을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민생·개혁 입법도 이견=각 당이 추

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약체제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與野), 야야(野野) 간 공조 체제 가동

여부가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검정수사권 분리 문제에 국민의당이 관심이 많은데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5·18 특별법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분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을 처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종석 靑 비서실장 레바논 특사 파견

해의 파견부대 장병 격려



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 150여명이 파견돼 UAE와의 국방 협력과 현지 거주 한국인 보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레바논에는 2007년부터 약 300명으로 이뤄진 동맹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됐다.

10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임 비서실장이 해의 파견 부대 장병 격려를 위해 9~12월 2박4일 일정으로 UAE의 아크부대, 레바논의 동맹부대를 차례로 방문한다"며 "특사 방문은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에서 평화 유지, 재외국민 보호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UAE 아부다비에는 2011년부터 육

썰렁한 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 연 50억 한도...5개 정당 눈에 띄는 성과 없어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중앙당 후원회 제도까지 11년 만에 되살렸지만 모금 성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아닌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후원금이 개별 국회의원에 몰리는 탓에 중앙당 후원회가 외면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150만 당원'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중순 중앙당 후원회를 결성한 후 이달 8일까지 2억9500여만 원의 돈을 모았다. 전체 후원자는 3659명으로, 1인당 약 8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의 성과는 국내 정당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지만, 당 안팎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부터 중앙당 후원회 출범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출범시키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내년 초까지 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마치고 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이달 5일 중앙당 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이용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후원회를 운영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바른정당은 지난 7월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달 말까지 모은 후원금은 3719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지난 9월 중앙당 후원회를 출범하고 '차카오페이'(착한 정치·착한 후원+페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는 노동조합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모금 활동을 벌였으나 후원금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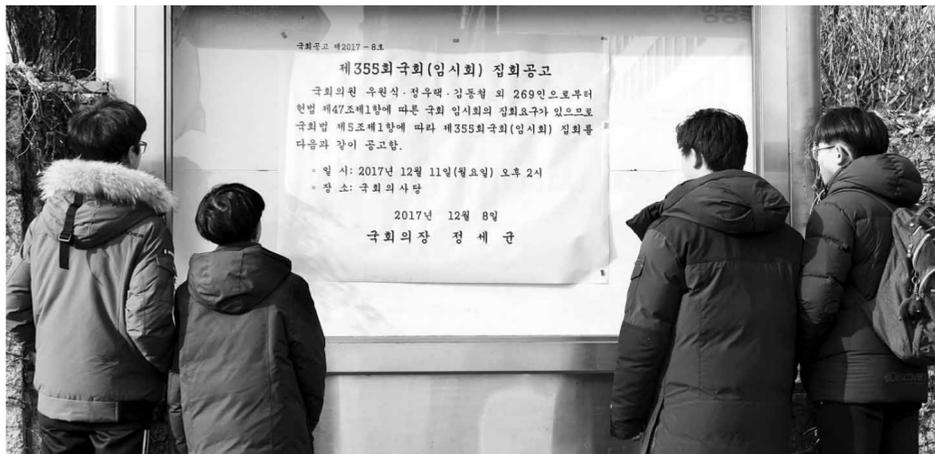
국정원, 권은희 의원도 사찰

'광주출신에 운동권 경력'...성향 조사 보고서 발견

국가정보원이 2012~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연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음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측으로부터 권 의원의 과거 경력과 성향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권 의원이 광주 출신에 운동권 경력이 있는 점을 부각하며 그가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의원이 당시 국정원 사건을 맡은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점에서 국정원이 수사의 객관성에 흠집을 내고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고서 내용이 경찰 수뇌부나 청와대로 전달돼 권 의원에게 직간접적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회 공고 붙은 국회 정문

국회 견학을 온 강원도 원주 원주반곡 중학교 학생들이 10일 오후 국회 정문 게시판 앞에서 오는 11일부터 개최되는 제355회 국회 임시회 공고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與 '공수처 설치' 총력전

"모든 당력 집중"...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쫓벌혁명으로 탄생한 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으로서의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가 수시로 언급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사정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분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

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최대 330일 이후 분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법안이 제정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명이다. 이들 6명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모두 합칠 경우 5명의 3 기준인 11명을 정확히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일 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하루앞까지 '안갯속'

김성태·홍문종·한선교 3파전...비홍 단일화 '변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진홍(진홍준표) 김성태 의원, 진박(진박근혜) 홍문종 의원, 중립지대 한선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확정됐다.

10일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결과, 이 같이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예초 유기준 의원의 출마의지를 보였으나 막판에 마음을 접었다.

한국당은 이틀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현재 판세는 안갯속이다. 먼저, 김성태 의원의 지지 세력은 당내 진홍 성향의 의원들과 바른정당 출신 북당파 의원들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 중립성향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함께 해 김 의원의 지지그룹이 상당히 폭넓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문종의 의원의 지지 세력은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다. 당내에는 여전히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홍 의원의 지지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심은 중립지대 의원들의 표심이다. 당초 중립지대에서는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준비했지만,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한선교 의원으로 정립됐다. 한 의원이 실제 경선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 **전국대표 1588-1543**
담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